

A circular inset image in the top left corner shows an industrial facility with several tall distillation columns and a complex network of pipes and scaffolding.

#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사회갈등관리

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의  
지속가능발전위원회, 고철환, 2004.05.03

#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

“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” (WCED의 Our Common Future ; 1987)

## ■ 1992년 유엔환경·개발회의(UNCED) :

### 리우선언과 의제21 채택

의제21의 이행평가를 위해 유엔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(UNCSD)를 설치,  
추진상황 점검

## ■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(WSSD) :

###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채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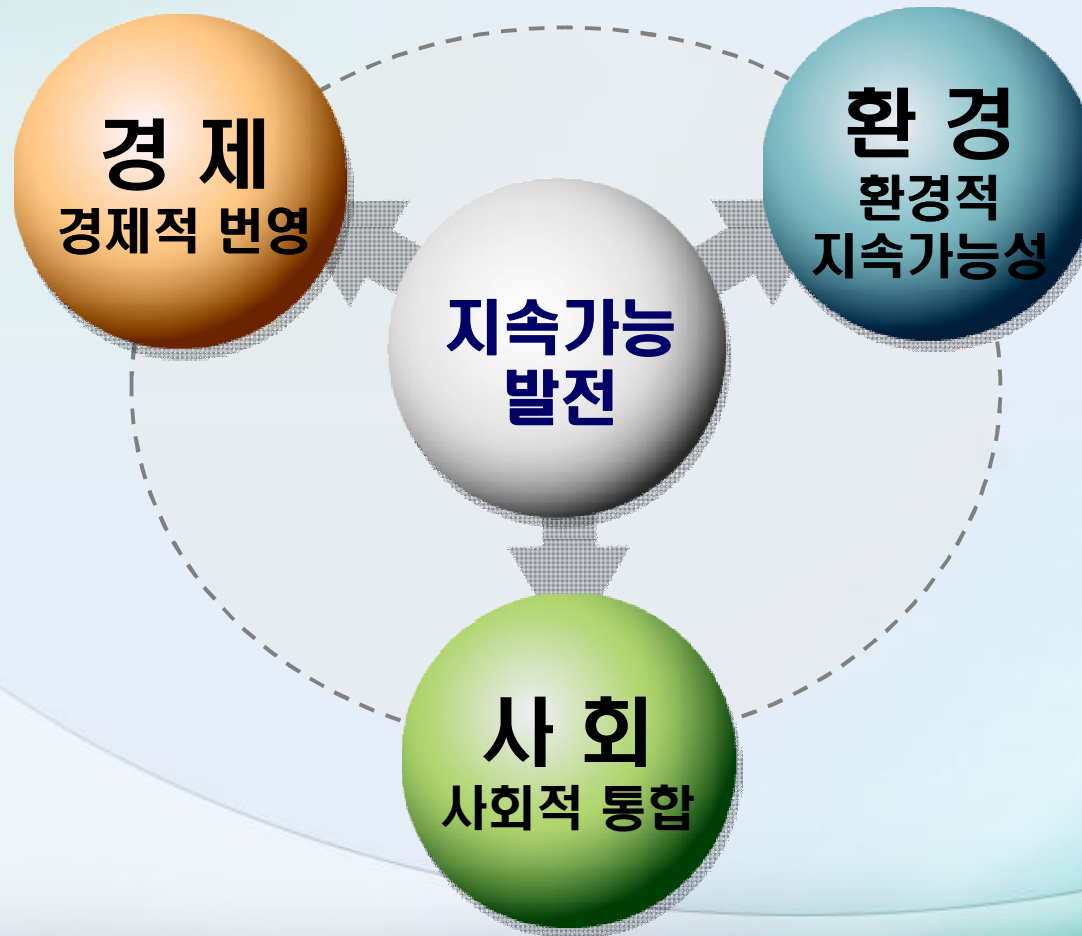
물·에너지·건강·생물다양성·빈곤 등 핵심쟁점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10~20년  
간  
지구전체가 추진할 과제와 이행계획 합의

## ■ 이념의 확대

환경과 개발의 조화 → 경제·사회·환경의 균형발전

#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

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
미래지향적인 이념



# 국제기구와 선진외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

※ OECD, 미국, 일본 등도 지속가능발전 관련계획 수립·추진



UN (UNCSD)

-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·보급
-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정책 평가



EU

-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·보급
-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방안 논의



영국

- 「보다 나은 삶의 질 :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·시행」 (1999)
-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 
지속가능발전 현황평가 및 정책실행 지원 등



독일

- 「독일의 전망 :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전략」 (2002)
-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, 지속가능발전 현황평가 및 국민의식 교육 등

#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실태

## 경제·사회·환경의 불균형 발전

### 경제적 지속가능성 지표

- 국내총생산 **13위**, 1인당 국민총소득 **54위**(2001년)
- 에너지 세계 **10대** 소비국

###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

- **소득불균형** : 최저소득(1분위)과 최고소득(10분위)의 소득격차 점차 심화
-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나 다양한 이해·가치관 갈등, 사회통합과 연대감 부족

###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

- 세계경제포럼(WEF) 환경지속가능성지수 평가 : 142개국 중 **136위**('02)
  - 환경정책성과를 평가하는 환경성과지수 : OECD 23개국 중 **15위**

#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간의 성과와 한계

## 성 과

- 새로운 가버넌스(New Governance)의 시범적 운영  
주요사업추진에 다양한 이해당사자(multi-stakeholder)들이 참여, 의견수렴을 거치는 새로운 의사결정문화 형성에 기여
- 국가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,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보완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

## 한 계

-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정립과 역할제고에 실패
- 정부부처간, 정부·민간간, 정부·산업체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사항에 대한 사전조율시스템 부재

##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전략에 의한 경제발전과 사회갈등해결이 핵심요소

### 국제동향

- EU 등 선진국의  
‘환경과 무역 연계’ 강화
- 선진국 녹색소비운동  
(Green Consumerism)  
활성화

### 국내동향

- 환경과 높은 삶의 질에 대한  
국민요구 확산
-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회갈등  
심화

#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원칙과 목표

- 활력있는 경제와 높은 삶의 질
-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 사회
-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
- 갈등해결을 통한 국민통합



# 조직도



# 위원회 구성 및 운영

## 본위원회

- 사회적 합의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지역 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함께 고려
- 국가 지배에서 국가, 지자체,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참여 가버년스로 전환
- 갈등관련과제에 대한 배심원적 기능 수행

**80인 이내**  
(현재 77인 위촉)

## 어용위원회

- 지속가능발전과제를 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처리
- 본위원회 상정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

**20인 이내**

- 위원장
- 전문위원
- 위원

## 전문위원회

- 과제발굴 및 연구·검토

**5개위원회**  
(각 위원별 15인 이내)

# 5대 핵심과제 선정 및 추진

정책의 시급성, 국민의 요구 감안

##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

- 물, 에너지, 국토 등 분야별 기본계획 마련

##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국가 주요 갈등사안 자문

- 시스템 구축으로 갈등 사전예방과 해결절차 제도화
- 국가 주요 갈등사안 사회적 합의도출 방안 자문

##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

-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에 의거 각종 계획 수립 유도

# 5대 핵심과제

갈등해결시스템 구축 및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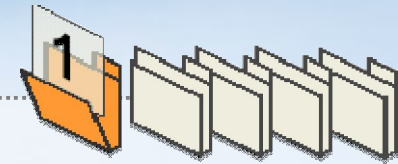
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

지속가능한 물 관리정책

지속가능한 국토·자연관리정책

세계지속가능발전 핵심과제 이행·지원

#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및 지원



## 갈등의 조정·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

### ■ 세부 정책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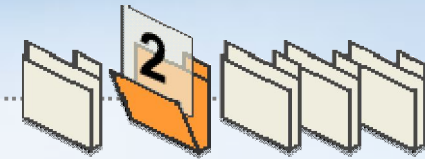
- 갈등예방 및 해결 프로그램 개발
- 정부조직 내부역량 강화와 민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
- 갈등해결관련 각종 기구와 법률정비

### ■ 갈등해결정책연구팀 발족('03. 10. 4) 및 활동

- '04. 2월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통령께 보고

## 내각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국가적 갈등사안에 대한 자문

-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,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안 도출



##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본계획 마련

### ■ 세부 정책과제

-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
-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방안
- 최적 에너지 믹스 전략 추진
- 에너지 기술혁신 방안
- 기후변화협약 대응

### ■ 에너지정책연구팀 발족('03.10.23) 및 활동

- '03.12월중 논의구조 및 추진방향에 대한 중간보고
- ' 04. 6월 참여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구상을 마련, 대통령께 최종보고



##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본계획 마련

### ■ 세부 정책과제

- 통합적 수자원 관리정책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조정체계 구축
- 사전예방적·과학적 수질관리대책 구축
- 종합적·체계적 물수요관리대책 구축
- 상습 물부족지역 해소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대책 확립

※ 물 수급 예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

### ■ 물관리정책 연구팀 발족 및 활동 예정

- '04. 7월중 참여정부의 물정책기본계획을 마련, 대통령께 자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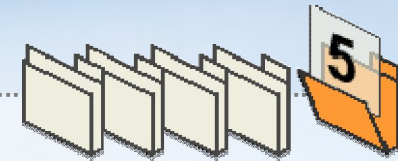


##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토·자연관리 기본계획 마련

### ■ 세부 정책과제

-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대책
- 국토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교통관리 대책
-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대책
-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대책
- 전략환경평가 제도 도입
-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균형발전 모색

# 세계지속가능발전 핵심과제 이행 및 지원



##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- WSSD 핵심과제 이행 및 평가 계획 포함

### ■ 세부 정책과제

-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검토
-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
- 학교와 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 홍보·교육 및 지식기반 강화

# 기타 추진검토 과제

##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보전과 이용

-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,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안 도출

##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

-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, 지속가능한 소비정책 및 녹색 소비자 운동

## 지속가능한 중앙·지방정책체계의 구축

- 친환경 지방자치 유도 및 자율환경 관리체계 구축
- 중앙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제도 마련(지방의제21 등)

##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방안 추진

-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
- 폐기물 매립지 및 공단 등 오염취약지역 주민·근로자 건강대책

# 에너지 정책 수립: 정책수립과정의 예

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위해 에너지정책 연구팀을 발족 (03.10.23)

- 물·에너지·갈등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: 지속가능발전위원회

정책과제(이슈)의 선택:

- 시민사회단체-언론-정부,국회로 연결되는 이슈-의제 설정 과정이 있다

이슈화-정책 형성, -정책 내용 결정, - 정책집행, - 정책평가의 과정을 거침

- 이슈화-정책의 형성: 시민사회와 정부간의 상호작용에 의함

정책 내용의 결정:과학, 기술적 합리성, 경제적 합리성, 정치적 합리성에 근거

#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수립 절차

정책 자문

정책 조율

정책연구 및 수립

정책과제 선정

# 정책형성단계: 정책과제 (이슈) 선정

## 과제 발굴

- 위원회에서 발굴 및 제안
  - 본위원회, 운영위원회, 전문위원회에서 제안
  - 과제의 발굴 및 선정시 기획적인 접근 필요
    - : 워크숍, 간담회, 세미나 등 심도있는 논의와 Brain-Storming 등 적극적 발굴
    - : 핵심정책과 일반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, 집중
- 대통령 자문 요청
- 정부 각 부처, 지방자치단체, 시민단체, 기업으로부터의 제안  
[제안요청 및 의견수렴]:  
시민단체, 언론, 정부, 국회 등의 이슈 도출 당사자가 있음

## 과제 선정

-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1차적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과제의 타당성 검토
-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참고로 최종적으로 확정

# 정책형성단계: 정책연구 및 수립

## 전문위원회 주관하에 연구팀 구성

-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직접 과제를 수행할지, T/F등을 별도 구성할지 결정
- Task Force(소위원회) 구성 시에는 해당과제에 적합한 전문가 발굴, 구성
  - 평소 해당 전문위원회별로 전문가 pool DB 구축
  - 전문가 pool에서 해당과제별 적합한 전문가 추천
  - 시민사회, 산업계 등에서 구성원으로 참여
- 자문위원회
  -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

## 연구방식 결정

- 전문가가 해당분야 집필하고 전문위원회 등 검토, 기획운영실 지원
- 주1회 이상 토론식으로 진행하되, 필요 시에는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, 토론회 병행

##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정책수립

- 본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
- 발표 형식의 슬라이드

# 정책형성단계: 부처간, 시민사회간 조율

## 단계적 조율

- 기획운영실 ⇒ 전문위원회 ⇒ 운영위원회 혹은 본위원회

## 조율방법

- 기획운영실장 주관 하에 부처 실무진 조율
- 전문위원회 간사 주관 하에 부처 실,국장 조율
- 위원장 주관 하에 부처 차관, 장관 조율
- 본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자문안 확정

## 시민단체 ·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

- 정책연구 및 수립단계에서 최대한 의견 수렴
- 중간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부처 조율과 같은 단계적 조율

# 정책결정단계: 자문안 보고

## 본위원회, 운영위원회 정책자문안 심의, 의결

- 의결방법 : 합의를 원칙으로 함

## 대통령께 자문

- 국정과제 (정책기획위원회와 연계) 및 일부 갈등관련 정책의 경우
  - 대통령 참석회의 형식으로 보고 및 자문
- 기타과제의 경우
  - 위원회 자체 심의, 의결 후 문건 보고

## 정책 결정

대통령께서 결정, 부처에 지시

# 에너지정책 수립의 예

- 에너지 안정수급 실현 및 선진 수준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
-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성공여부가 관건

2000년대

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정책 필요성 대두

1990년대

에너지이용 효율화 · 에너지산업의 점진적 자유화시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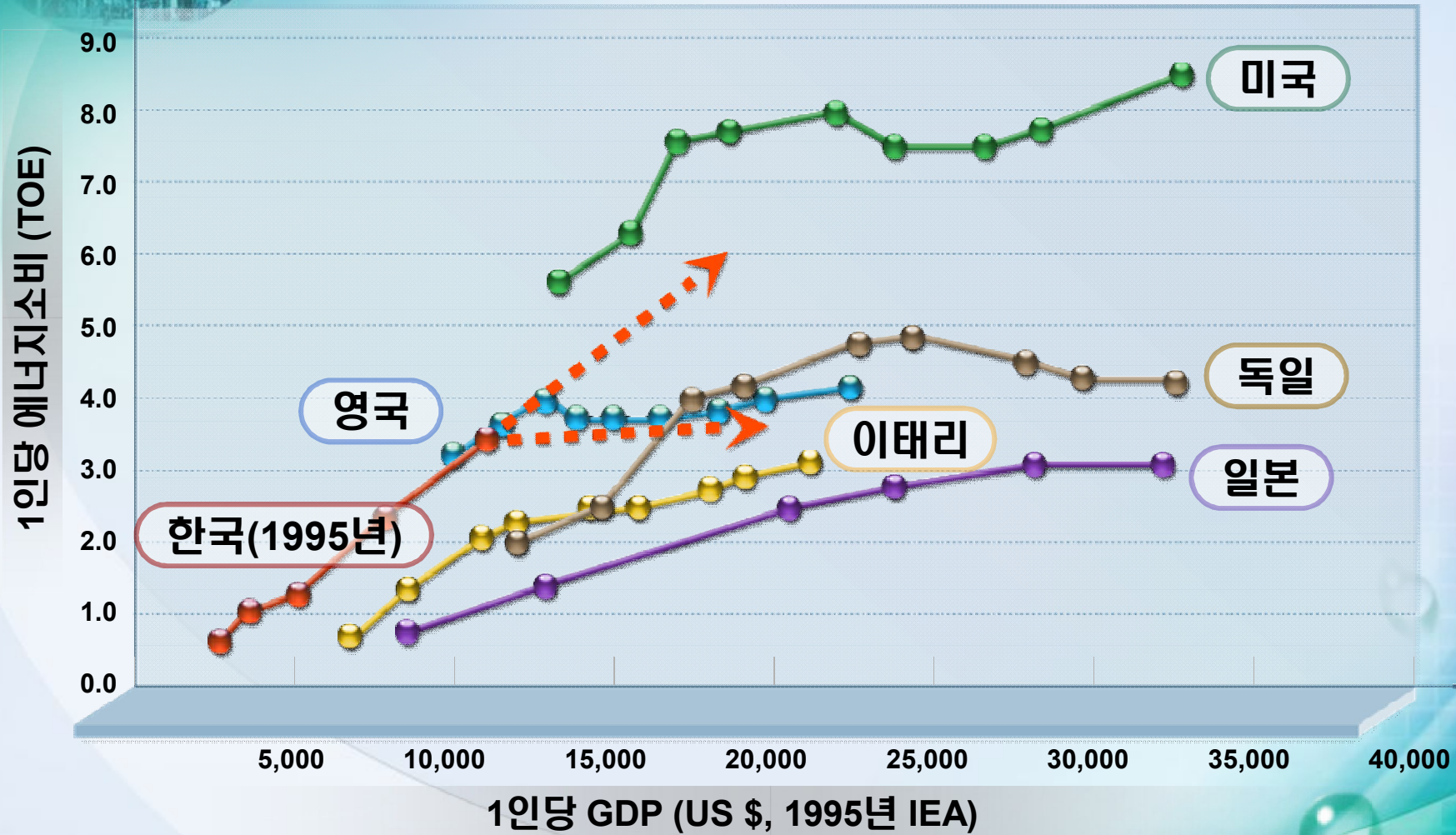
1980년대

에너지원 다원화시책 추진  
(원자력·유연탄·천연가스 발전소 건설, 천연가스 공급망 건설)

1970년대

경제개발을 위한 에너지의 안정공급에 역점  
(석유파동 극복)

# 주요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1인당 에너지 소비 추이 (1960 ~ 2000)



#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요인

##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증대

- 중동,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안요소 상존
- 중국의 고속성장과 석유수입 급증가로 국제에너지 수급 불균형 우려

※ 일 평균 석유수입량

중국 1.7백만배럴(2001) → 4.2백만배럴(2010) / 한국 2.2백만배럴(2002)

##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 가시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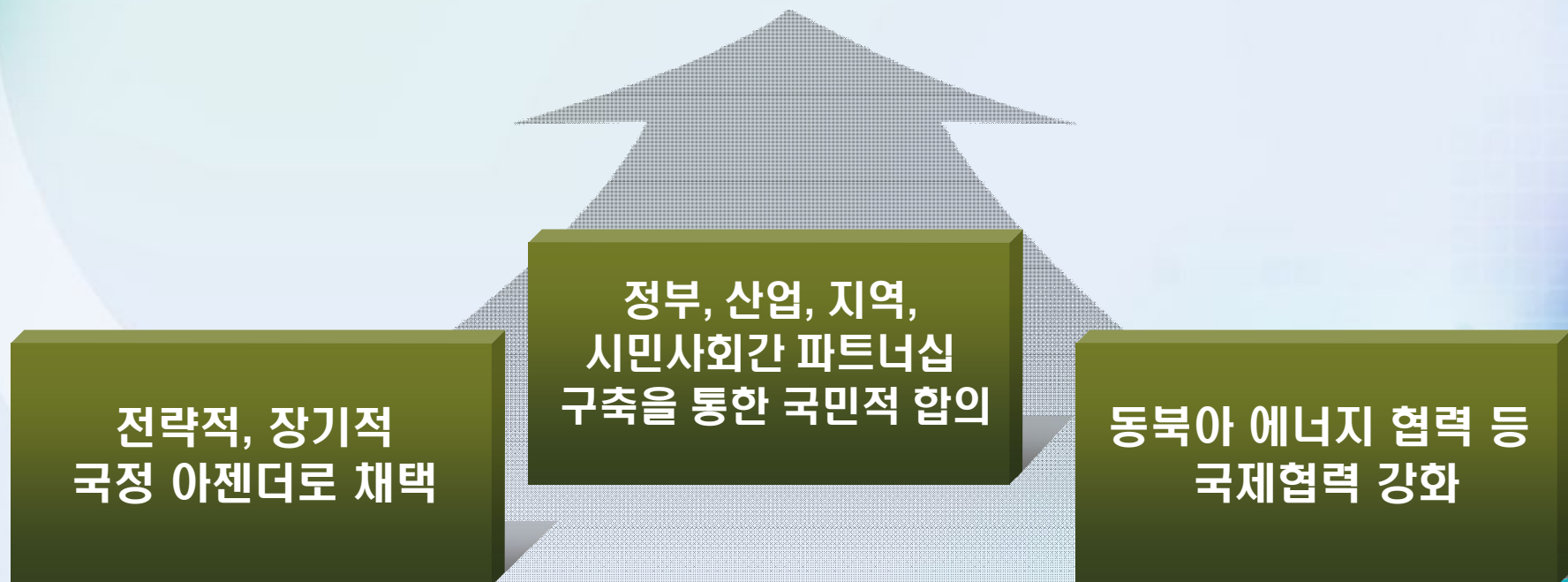
- 2005년부터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추가의무부담 논의예상 (2013년부터 의무부담압력 가시화)
-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심화로 사회적 비용 급증

## 에너지문제 해결책으로서 에너지기술개발의 중요성 증대

##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요구 및 NIMBY현상 심화

#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목표와 전략

- 에너지 안보 강화
-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, 소비체제 구축
- 에너지 기술혁신체제 구축



# 정책과제 선정

## 안 보

-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
- 중국 석유수입증대 및 동북아의 중동 의존도 심화

## 환 경

- 기후변화협약 가시화
- 대기환경오염 심화

## 사 회

- 장기 정책의 공론화 필요성 증대
- 입지관련 갈등 심화

# 신·재생에너지 확대



## 기술혁신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확대

### ■ “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” 수립 추진

- 보급목표의 획기적인 확대 : 1.4%('02) ➡ 3%('06) ➡ 5%('11)

※ 선진국의 신·재생에너지 비중(00년) : 덴마크 10.8%, 프랑스 6.8%, 미국 5.0%, 일본 3.2%

- 8년간('04~'11) 9조1천억원 소요

### ■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

- “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촉진법” 등 관련법령 개정
-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신·재생에너지 진흥기금 설치방안 검토
-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
-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또는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필요 (발전의무할당제도)

- 투자 우선순위 논쟁과 재원조달 방안

# 갈등관리의 배경 및 접근방법

사회 갈등이 누적되면서 그 양상이 복합적으로 전개됨

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됨에 따라

억압형 → 잠재형 → 표출형 → 확산형 으로 갈등양상이 변화

- 합리적 협상과 이익의 조화보다는 감정적 대립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 노출

■ 시스템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없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 어려움

갈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 이에 기초한 정책적 대안의 도출 필요

■ 분야별 사례연구와 연구결과를 DB화 하고 갈등현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 마련

- 국내 갈등관리 시스템을 진단하고 선진국의 제도운명을 분석, 시사점 도출

■ 갈등관리방향에 대한 법·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선·정비방안을 제시

# 갈등관리 정책목표

##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통합

-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적 관행을 개선

## 갈등관리 프로세스 개발을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

- 갈등예방 프로세스의 설계
-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설계

##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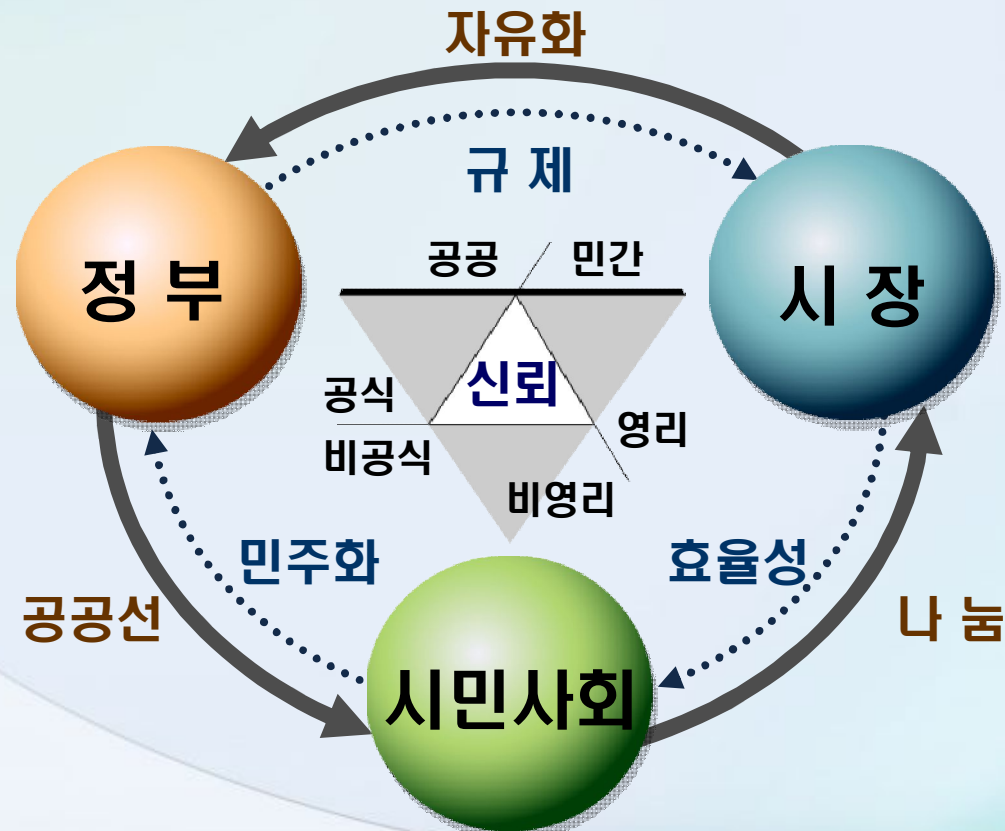
- 학생, 시민, 공무원 대상
- 갈등관리지원센터 등의 신설을 통한 갈등연구 및 교육훈련 강화

## 법·제도 정비를 통한 효율적 갈등관리시스템의 정착

- 사회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제고

# 갈등관리정책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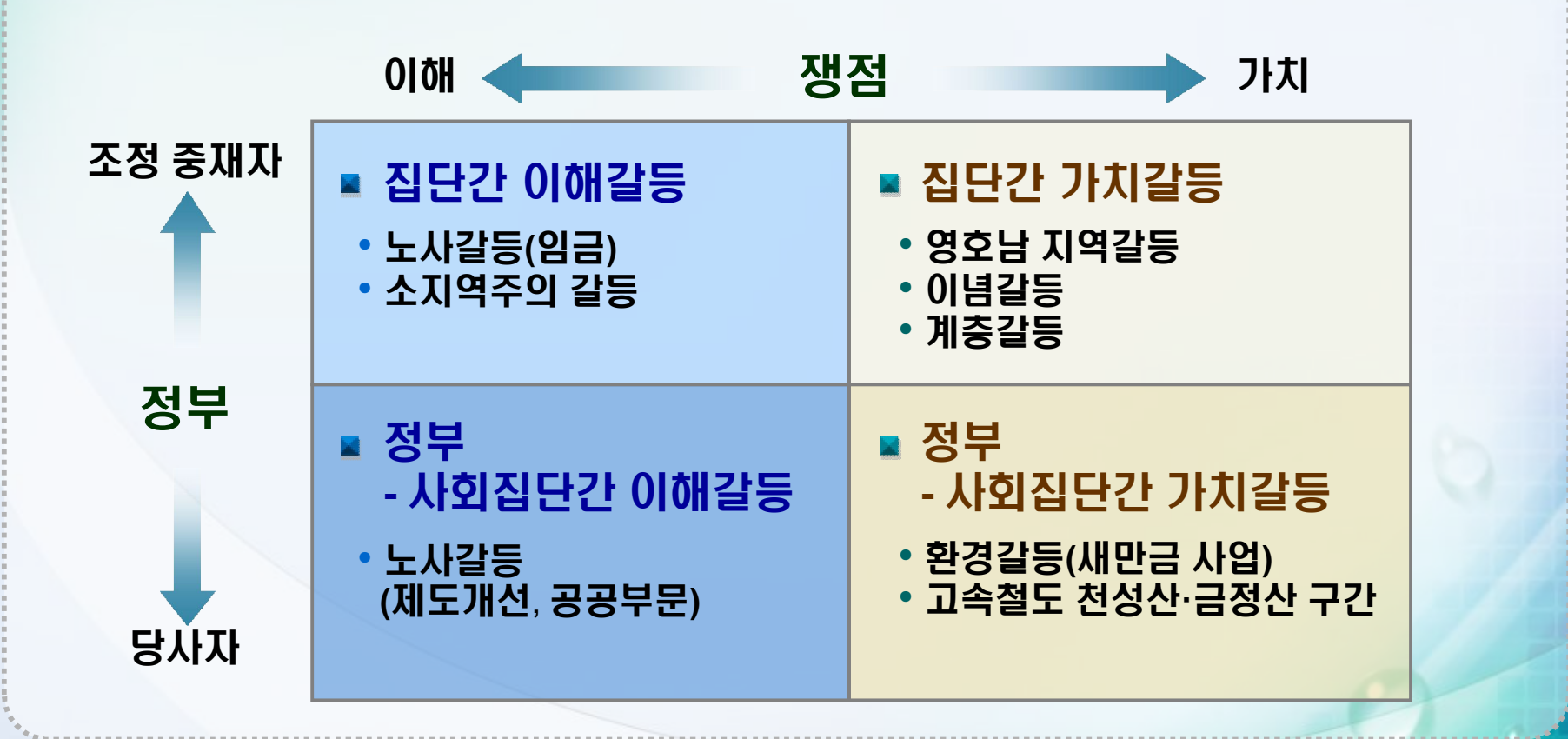
- 정부·시민사회·시장의 균형발전을 통한 신뢰 구축
- 합의와 설득절차를 통한 타협과 협력문화 형성
- 공정성·전문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권위 확립



# 갈등유형 분류 - 정부의 역할 및 갈등 원인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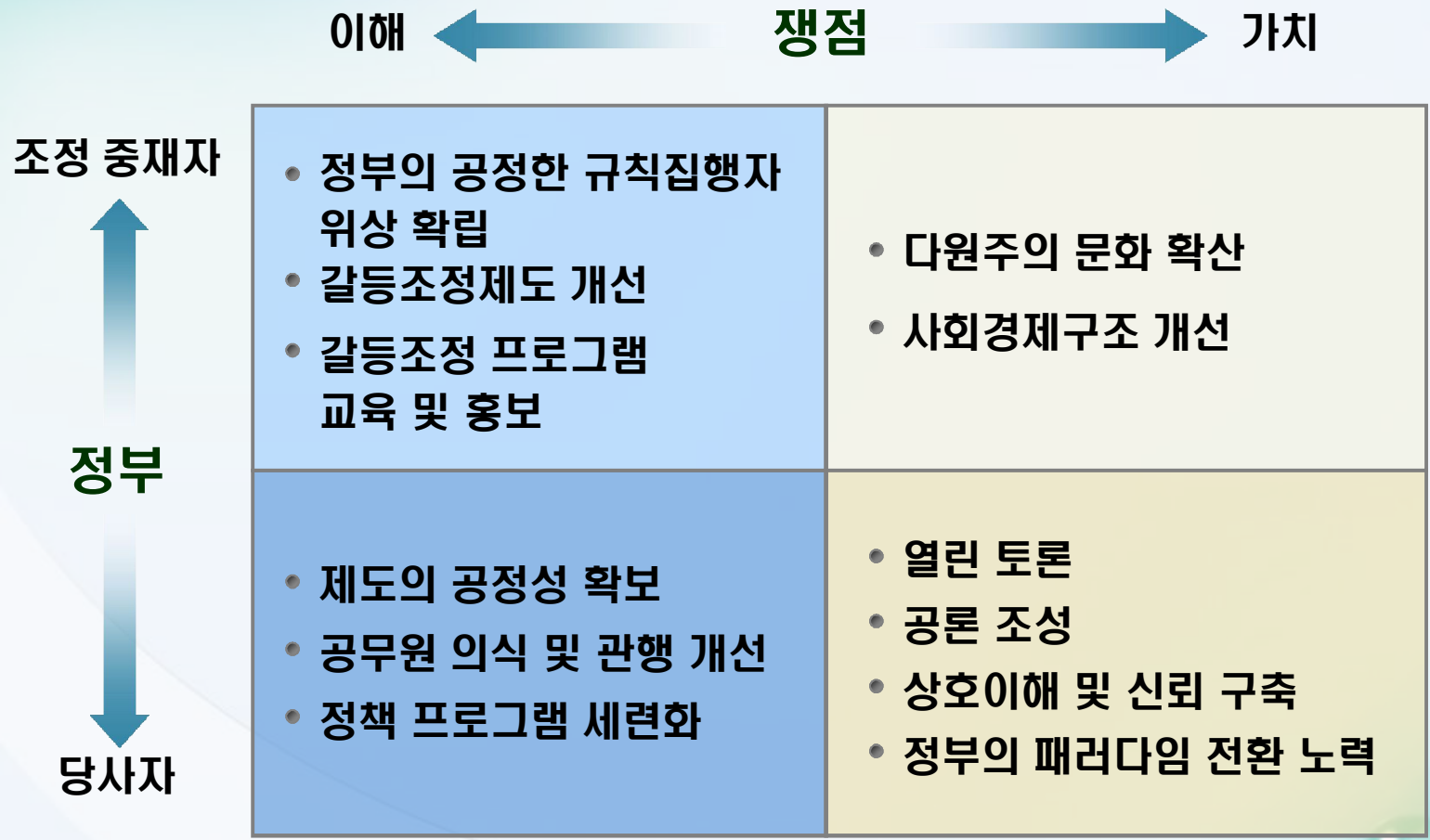
사회갈등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함

정부의 역할과 갈등의 원인(쟁점)에 따른 분류



# 갈등유형 분류 - 정부의 역할에 따른 해결방안

## 정부의 역할과 갈등의 원인(쟁점)에 따른 유형별 해결방향



# 갈등관리정책 기본방향 - 갈등유형별 대응방안

## ■ 정부·시민사회·시장 부문에서 갈등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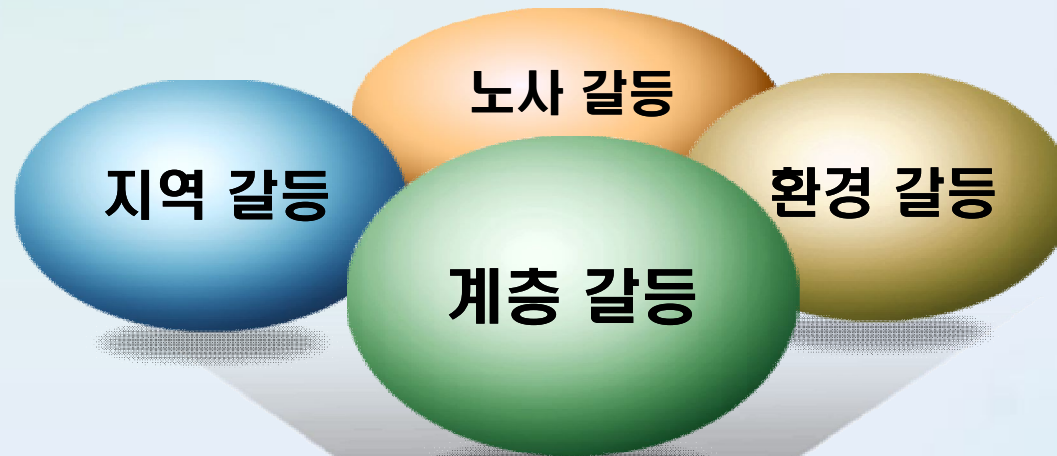
	정 부	시민사회	시 장
지역 갈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간 산업불균형의 해소</li> <li>■ 지자체의 지역혁신체제 구축</li> <li>■ 지역간 산업불균형의 해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갈등해결형 시민운동 활성화</li> <li>■ 지역간 문화교류 사업 확대</li> <li>■ 언론의 순기능적 역할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경제의 활성화</li> </ul>
계층 갈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·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종합검토 및 정책방안 제시</li> <li>■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</li> <li>■ 시민적 덕성 형성</li> <li>■ 더불어 사는 문화형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당한 부의 축적 이해</li> <li>■ 기업의 사회안전망 기여</li> </ul>
노사 갈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뢰구축과 법치에 의한 규율</li> <li>■ 노사정의 사회적 협의 강화</li> <li>■ 조정 및 중재의 활성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합리적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규범 확립</li> <li>■ 사회적 대화 활성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투명한 경영</li> <li>■ 노사간 신뢰형성</li> <li>■ 사적조정 및 중재의 활성화</li> </ul>
환경 갈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무총리실 조정기능 보강</li> <li>■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 참여</li> <li>■ 갈등조정과 합의문화 형성</li> <li>■ 환경갈등해결 시민사회 형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오염자부담의 원칙</li> <li>■ 환경경영</li> </ul>

# 갈등관리정책 기본방향 - 갈등유형과 대응프로그램

이해 갈등

가치 갈등

이익, 절차, 상호관계, 구조적 문제, 사실관계, 이념, 가치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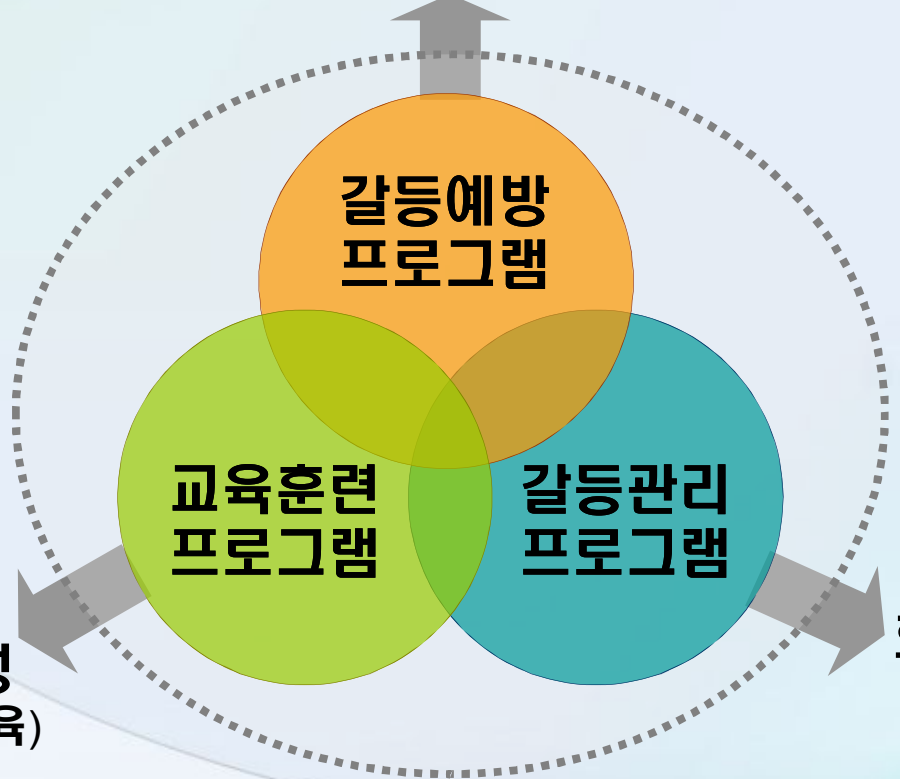


예방	사실확인	시나리오워크샵	시민배심원
협상	중재	합의회의	규제협상
조정	정책다이얼로그	공론조사	공생의 장 창출

# 갈등관리 프로그램 개선

선진국의 갈등관리 프로그램 중 우리 실정에  
적합한 제도를 적극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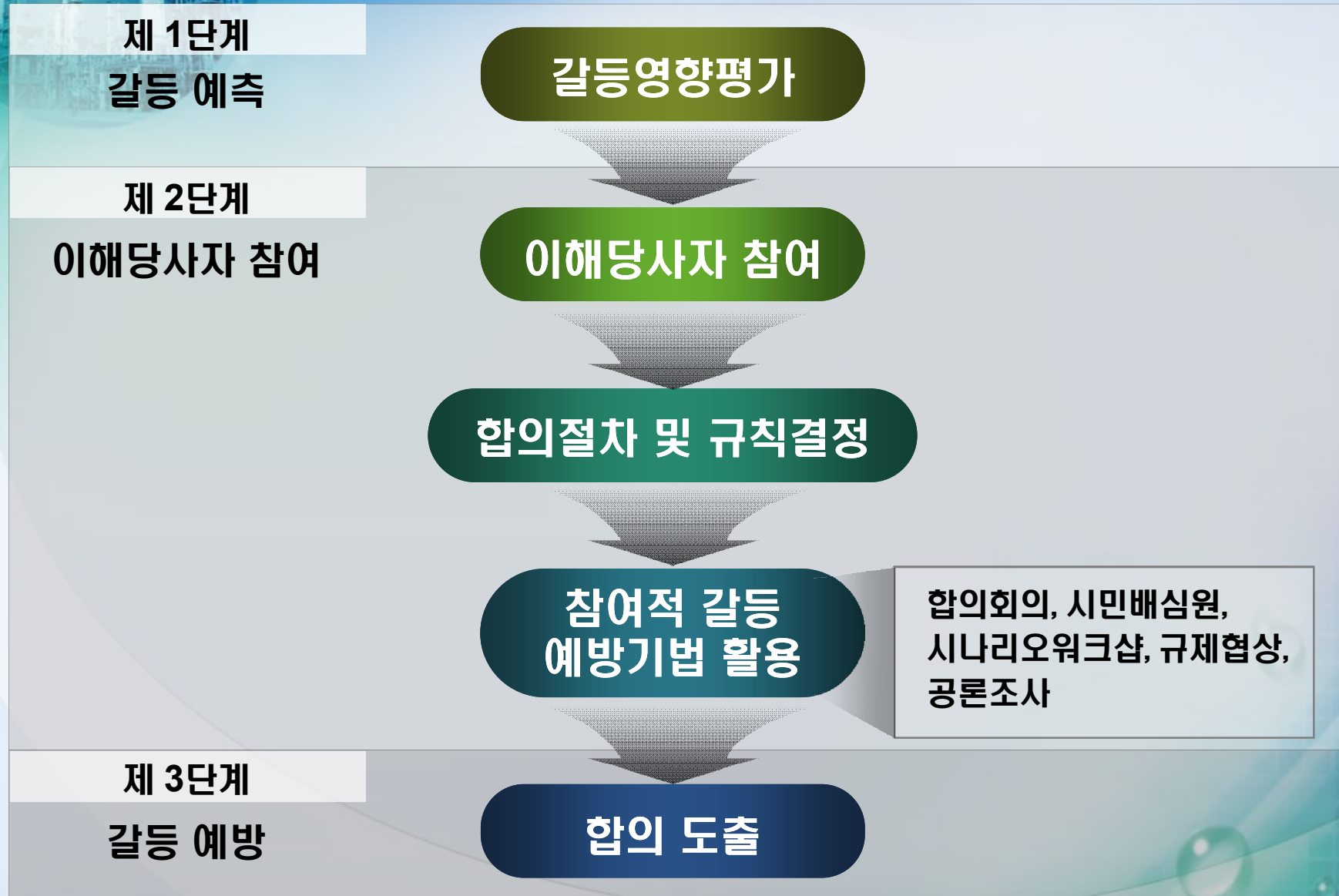
참여적 정책결정  
(합의회의·공론조사·시나리오 워크숍 등)



사회적 합의와  
협력의 문화 형성  
(학생·시민·공무원 교육)

호혜적 결과도출  
(협상·조정 등)

# 갈등예방 프로그램 - 일반적 절차



# 갈등예방 프로그램 - 갈등예방 방법과 그 적용범위

	갈등의 성격	갈등의 범위	이해당사자	대표성/ 심사숙고성	성격/사례
합의회의	가치갈등	전국적·지역적	전국민	대표성 낮고 심사숙고성 높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문가 의견수렴</li> <li>· 생명복제기술</li> </ul>
시민배심원	가치갈등	전국적·지역적	전국민	↑ ↓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구조화된 시민참여</li> <li>· 수질문제, 조세문제</li> </ul>
시나리오 워크숍	가치갈등 이해갈등	지역적	지역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정부, 전문가, 산업계, 시민참여 작업모임</li> <li>· 지역포럼</li> </ul>
규제협상	가치갈등	전국적·지역적	뚜렷한 이해 당사자 존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행정규제에 영향받는 집단과 합의</li> <li>· 규제정책</li> </ul>
공론조사	가치갈등 이해갈등	전국적·지역적	전국민/ 특정집단	대표성 높고 심사숙고성 낮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확률표집으로 대표성을 가진 집단의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</li> </ul>

■ 상황에 따라 변형해 활용할 수 있으며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
#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적용 - 한탄강 댐 사례

## 갈등 현안

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/조정위원회 구성

Yes

조 정

No

이해당사자와 프로세스 합의  
(합의회의, 시민배심원, 공론조사, 주민투표 등)

Yes

합의된 프로세스 진행

합의도출

갈등 해결

No

본위원회 회부

정보에 바탕한 토론

본위원회 확정 후  
대통령께 자문

No

#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사회 저변의  
갈등관리  
역량 제고

초·중·고등학생

-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규 교과목 편성·운영을 권장
- 교내 “또래간 문제해결 프로그램” 운영을 통해 학생들 자체적으로 교내폭력 등의 갈등해결 유도 및 갈등관리의 생활화

대학생

- 갈등관리 관련과목 편성·운영을 권장
-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갈등관련 전공과정의 개설 권장 및 지원

시민단체

- 시민단체 중심의 갈등관리 프로그램에 정부와 관련기관의 제도적인 지원
- NGO 활동가 교육 및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

현장공무원

- 참여행정, 갈등에 대한 이해 및 협상 / 조정능력 향상교육 실시

일반공무원

- 참여행정, 일반적인 갈등관리능력 제고 및 정기적인 교육

전문가 그룹

- 정책갈등이나 사회갈등에 직접 투입되는 갈등관리 전문가 (강사) 육성

정부조직  
갈등관련  
내부역량 강화

#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민간전문가  
양성을 통한  
전문  
중재서비스

전문가 양성

- 갈등관련 전문교육 후 공인 조정중재자로서 활동
- 기존의 전문가 중에서 변호사, 노무사 등 관련 국가공인 자격사의 경우 일정기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(예: 4주 과정) 이수 후 공인 조정중재자로 활동

갈등관련  
전문연구

전문연구기관  
설립 및 지원

- 다양한 분야별 전문연구의 활성화 - 재정 지원 및 제도 활성화
- 외국 이론의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
- 우리 문화에 맞는 갈등관리 방식의 개발

##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– 필요성과 기본방향

### 필요성

- 기존의 분산된 갈등관리 제도의 체계화
- 효율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
-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

### 기본방향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함
- 대안적 갈등해결 방안의 개발과 보급
- 갈등이해관계자의 당사자 해결원칙 적용
-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
- 갈등관리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

#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- 법(안)의 주요 내용

	주요 내용
총 칙	-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, 갈등관리의 기본 원칙
국가와 지자체의 책무	- 정책결정과정 참여기회 및 의견수렴의 확대 -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- 갈등관련 교육,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지원
갈등관리 지원기구	- 갈등관리지원센터 설치 -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업무
전문조정중재인	- 중재자의 자격, 양성 및 활용 - (가칭) 한국조정중재협회 설치

- 추진계획 : 「갈등관리기본법」 제정 추진단 구성·운영

#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

- 참고자료 : 외국의 갈등관리 관련법과 제도 현황



미국

- 행정분쟁해결법(1990년), 협상에 의한 법규 제정법(1990년)
  - 대안적 분쟁해결(ADR)을 분쟁해결의 주요방법으로 채택
  - 분쟁해결 전문가 활용
  - 공무원 분쟁해결 교육훈련 실시



EU

- 독일의 경우, 국토 도시계획 및 기타 공공사업계획법제에서 계획형량제도를 통한 갈등관리 원칙 의무화
  - 공공사업계획의 계획확정절차 시행으로 절차적 정의 확보 및 갈등의 사전조정
- 네덜란드의 경우, 이해당사자가 정책형성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기획제도 운영(InfraLab)



일본

- 일반적 갈등관리방안으로 ADR 기본법(안) 입법화 추진중

#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

## - 기타 법·제도 (공공사업관련) 개선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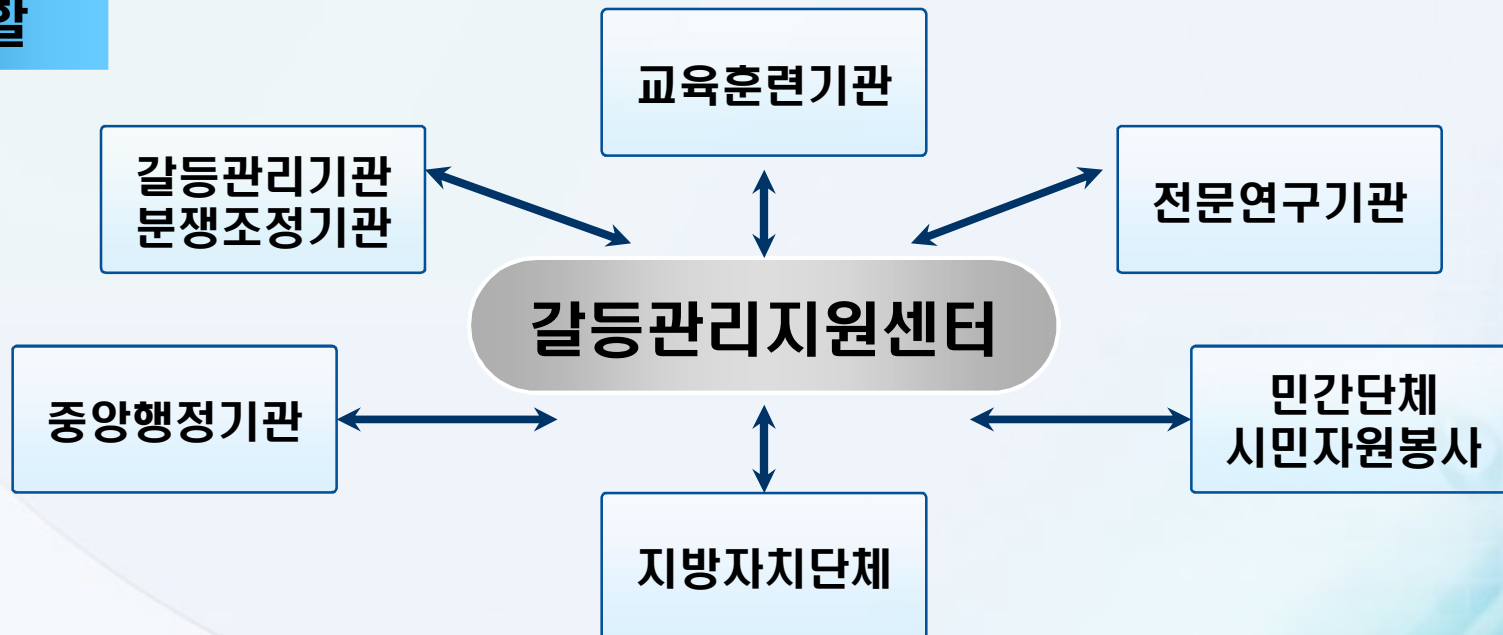
- **계획법에서의 형량(衡量)원칙의 명문화**
  - 국토계획, 도시계획 및 대규모 사업계획에서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야 함을 규정
- **계획확정절차 도입**
  -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신중하게 공공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절차법 개정
- **사회영향평가제도 개선 및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**
- **행정쟁송제도의 개선**
  - 행정소송,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완화 및 행정심판제도에 있어서 조정제도의 도입
- **ADR기법을 활용한 공공사업분쟁조정제도의 도입**
- **간접보상 등 토지보상체계의 개선**
- **기피시설 등(댐,방폐장,폐기물처리시설)의 입지저항과 관련한 제도개선**

#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추진

## 필요성

-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갈등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수립·지원
- 사회갈등에 대한 조정 및 관리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
- 갈등 예방 및 관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연구 활성화

## 역할



#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추진 - 조직 및 기능 (안)

## 갈등관리지원센터

갈등관리 자문위원회

행정지원실

### 법·제도 연구팀

- 외국의 갈등관리 법제 연구
- 현행 법·제도 개선 방안 연구

###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팀

- 학생, 시민,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### 연구지원팀

- 대학, 연구기관, 시민단체 등의 연구 지원

### DB 운영팀

- 갈등관리정보 DB 구축 및 통합관리
- 갈등관리전문가 DB구축 및 활용

#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추진

- 참고자료 : 미국의 갈등관리지원기관 사례

